

# 박근혜 정부의 지방 과학기술 정책

2013. 4. 8

차 두 원

# 목 차

1. 주요 지방R&D 공약과 국정과제
2. 지방R&D 관련 정부 조직
3. 그간 주요 지역R&D 논의사항
4. 향후 충남 정책추진 방향은?

# 1

주요 지방R&D 공약과 국정과제

# 지역공약

## 대한민국 어디나 살기 좋아집니다.

어느 지역에 살 건, 어느 직업에 종사하건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으면서 누구나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100%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도약하고, 국민 모두가 100% 행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지역이 균형적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그동안 수도권 규제와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꾸준히 추진되어 왔지만, 수도권의 인구 집중과 경제력 집중은 여전합니다. 지방의 재정지립도는 오히려 하락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정격차는 확대된 반면, 늘어나는 복지수요로 인해 지방의 재정부담은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의 패러다임을 과거의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각 지방이 각자 특성에 맞게 발전하면서 그 발전의 총합이 국가발전으로 이어지게 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자율성을 가지고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해서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동시에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지방 행정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 | 지역공약 | 지역사회를 깨우고 지역경제를 깨우고 미래를 깨우겠습니다.
- | 부산 | 세계 5대 해양도시로 도약합니다.
- | 대구 | 미래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중추도시로 성장합니다.
- | 인천 | 인천과 함께 대한민국이 세계로 뻗어갑니다.
- | 광주 | 광주의 무한한 가능성, 지속가능한 발전이 시작됩니다.
- | 대전 | 첨단과학기술과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 新중심도시입니다.
- | 울산 | 대한민국 미래 경제를 이끌어갈 역동적인 산업도시가 됩니다.
- | 서울·경기 | 서울시민과 경기도민의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 | 강원 | 세계가 강원도를 주목합니다.
- | 충북 | 첨단산업 육성을 통해 충북의 가치가 더욱 극대화됩니다.
- | **충남** | 충남을 서해안 발전의 시작점으로 삼겠습니다.
- | 전북 | 새만금의 가치와 함께 전북이 새로워집니다.
- | 전남 | 친환경 에너지와 미래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합니다.
- | 경북 | 전통과 첨단, 새로운 발전, 경북이 앞장섭니다.
- | 경남 | 자연과 기술이 조화된 새로운 경남으로 거듭납니다.
- | 제주 | 생애 한번쯤 가고 싶은 세계 속의 명품관광도시가 됩니다.

# 공약집의 주요 충남 사항은?

대한민국  
어디나 살기 좋아집니다

## [ 충남 / 세종시 ]

행정과 과학기술의 중심지인 내륙지역과 서부지역을 연계해서  
충남을 중부권의 중추지역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도청신도시의 원활한 조성과 정착을 지원하여 새로운 행정  
중심과 성장거점을 구축하고, 서해안의 항만과 내륙의  
연결 교통망을 구축하여 충청남도를 대중국 수출의  
전진기지로 육성하겠습니다.

백제역사문화도시의 조성과 기호유교문화권  
의 종합적인 개발·보전으로 충청권 주민들의  
자긍심 고취와 지역정체성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 | 충남 1 | 충남도청 이전소재지 지원
- | 충남 2 | 충청내륙고속도로(제2서해안선) 건설 추진
- | 충남 3 | 공주·부여 백제역사문화도시 조성
- | 충남 4 | 동서 5축(보령 ~ 울진) 고속도로 건설 추진
- | 충남 5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 및 지역 연계 개발
- | 충남 6 | 명품 세종시 건설 적극 지원
- | 충남 7 | 충청권 광역철도(논산 ~ 대전 ~ 세종 ~ 청주) 건설

충남3

### 공주·부여 백제역사문화도시 조성

공주·부여의 백제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백제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관광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 세시화에 맞춘 관광 인프라 조성 및 지역 연계 개발

충남5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 및 지역 연계 개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연구  
과 과학기반의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7  
기능지구를 긴밀하게 연계시키고, 기능지구의 역할 강화를 위해 추가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투자예산의 점진적 확대

충남6

### 명품 세종시 건설 적극 지원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명품·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과학벨  
트 기능지구의 활성화, 민간기업 이전촉진을 위한 투자유치, 산업집적단지 조성,  
대학클러스터 구축지원 등 추가적인 발전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세종시 발전을 위한 법령 개정 검토
- 상생협의회 구축 지원 및 광역교통망 확충

##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한 지방행정제도 개선

### 새누리의 진단

-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지방정책은 부처간 중복과 낭비 초래
- 지방이 각자의 스타일을 지키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행정권한의 위임과 지방분권이 필요

### 새누리의 약속

- 지역마다 각기 다른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 스스로가 자율성을 가지고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
-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을 재정비, 복지사업 등 국고보조사업 조정
  - 인간다운 삶의 최저수준을 보장하는 복지사업은 전적으로 중앙정부가 담당, 추가적인 사업은 스스로 재원을 조달해 실행
  - 분권교부세를 지방교부세로 통합, 현재 사업의 대부분을 지방사무로 전환 하되, 장애인시설운영 등 일부는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
  - 중앙정부의 복지정책이 지자체의 지출부담을 초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합의하여 결정

### 새누리의 실천

-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해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현지성 높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는 획기적으로 지방이양

## 100% 국민행복과 국민대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 새누리의 진단

- 수도권 규제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인구 및 경제력 집중현상은 여전
-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각 지방이 각자 스타일로 발전해가면서 그 총합이 국가발전으로 이어지게 해야 함.

### 새누리의 약속

- 지자체가 주도, 정부는 지원하는 방식으로 실질적 지방분권화 실현
  - 지방의 특성을 살린 맞춤형 지방정책 추진
  - 지자체, 지역전문가, 주민들이 상호협력·주도하는 지방정책 추진
- 중앙정부 주도의 지방 산업정책을 투 트랙(Two-Track)으로 전환
  - 중앙정부는 장기적·광역적 관점에서 미래 성장동력산업에 주력
  - 지자체는 지역산업, 지역인재, 지역 과학기술의 3가지 핵심축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지역발전정책 추진

### 새누리의 실천

- 8대 핵심 정책으로 ①동서통합지대 조성 ②스마트한 지방도시재생사업 ③지방거점도시(10+α)의 지역중추도시권 육성 ④평화지대 프로젝트 ⑤신공항 건설 ⑥사통팔달 전국교통망 ⑦낙후지역 휴양·관광벨트 구축 ⑧지역발전 정책 추진체계 개편을 추진
- 지자체가 주도하는 지역별 특성을 살린 맞춤형 지역발전전략 추진
- 지자체·주민 주도의 지역정책 추진체계 구축 및 지방재정 확충
  - 지역발전위 강화, 지역발전위와 광역발전위의 권한·조직개편
  - 행정 권한의 획기적인 지방 이양 및 지방 자주재원 확충

## 지방대학 발전사업 추진 및 지역대학 출신 채용할당제 도입

### 새누리의 진단

- 수도권으로의 경제력 집중 등 서울과 지역 간 격차가 커짐에 따라 우수인재들의 지역대학 진학 기피 현상 심화
- 지방대학의 양적팽창에도 불구하고 서울 소재 대학과 비교시, 교육·연구 여건 격차는 해소되지 않고 있음.
- 지방대학의 낮은 취업률로 인해서, 우수학생이 지방대학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

### 새누리의 약속

- '지방대학 발전사업'을 통해 지방대학의 교육·연구 여건개선과 특성화에 집중투자
- '지역대학 출신 채용할당제' 도입
  - 신규채용자의 일정비율을 지역대학 출신자로 채용하는 '지역대학 출신 채용할당제'를 공공기관부터 확대 시행(기관별 특성에 맞게 채용할당제·목표제 및 전형단계별 가점부여 등을 통해 지역인재채용 단계적 확대)
  - 국가·지방 공무원 지역인재채용 목표 비율을 상향조정
  - 주요 기업 및 경제단체와 함께 직무능력 중심 채용 및 지역대학 출신 채용 확산 캠페인 추진
  - 직무능력중심의 평가인증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역대학 차별 해소
  - 지역거점 지역대학별로 산학연 K Valley 창업 클러스터 집중 육성

## 청년들의 상상이 현실이 되도록 청년창업 대폭 지원

### 새누리의 진단

-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산업 및 첨단산업에 대한 창업 부족
- 창업에 대한 지원 미진, 실패한 자영업자가 재기할 수 있는 환경 미흡

### 새누리의 약속

- 대학의 창업기회화를 통한 청년창업가 양성
-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을 체계적으로 통섭한 융합인재 양성
- 산학 공동연구물의 소유권 합리적 조정,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의무화 등 창조적 인재 보호
-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및 금융 지원 확대
-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인수합병 활성화
- 콘텐츠 펀드 규모 확대 및 프로젝트 개발 지원
- 정부와 대기업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창업기획사'를 설립하고, 오디션 방식으로 청년층 창업아이디어 발굴, 창업 멘토링 및 경영컨설팅 등 지원
- 정부와 기업의 공동출연으로 청년창업펀드를 만들어 청년창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및 패자부활 기회 부여

### 새누리의 실천

- 전문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제도 정비 및 대학 지원 계획 수립
- 엔젤투자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 콘텐츠 펀드 등을 위한 법 개정
- 청년창업기획사 및 청년창업펀드 설립 및 운영 정책 지원

## 국정목표 1

### -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추진전략 1 .....	13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추진전략 2 .....	25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강화	
추진전략 3 .....	35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추진전략 4 .....	43
창의와 혁신을 통한 과학기술 발전	
추진전략 5 .....	49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	
추진전략 6 .....	57
성장을 뒷받침 하는 경제운영	

## 추진전략 1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 (1)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 산업 육성
- (2) ITSW 융합을 통한 주력산업 구조 고도화
- (3) 산·학·연·지역 연계를 통한 창조산업 생태계 조성
- (4) 서비스 산업 전략적 육성기반 구축
- (5) 자본시장제도 선진화
- (6) 협력적 기업생태계 조성
- (7) 세계 최고의 인터넷 생태계 조성
- (8) 청년 친화적 일자리 확충기반 조성
- (9) 고용친화적 정부정책을 위한 고용영향평가제 강화
- (10)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로 따뜻한 성장 도모



## 1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산업 육성

### 가. 과제개요

- 과학기술의 책임과 역할을 확장하여, 新산업을 창출하고 사회 이슈를 해결하는 등 국민행복에 실질적으로 기여

### 나. 주요 추진계획

- ① (과학기술정책 패러다임 전환) 기술·지식 확보가 목표인 현재의 분절형 R&D를 신산업 창출을 위한 일련의 과정을 통섭하는 「생태계 창조형 R&D」로 변경

\* 연구개발 또는 기존 기술의 발굴, 글로벌 시장개척을 위한 인프라, 제도개선·규제완화, 공공구매 연계 등까지 포함

- ② 과학기술과 아이디어·상상력을 융합한 신산업 창출

- (신성장동력) 과학기술에 기반한 미래예측으로 유망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문화컨텐츠·SW·인문·예술과 융합
- (사회이슈해결) 고령화·에너지 등의 국가당면 이슈를 해결하고, 사회복지·안전 등 공공시스템과 연계한 新시장 창출 지원
- (실용기술 활용) 사업화창업 아이디어와 기술 보유자, 투자자를 매칭하고, 제품화를 위한 후속 R&D와 공공구매 연계 등 지원
- (과학기술 서비스) 빅데이터·초고성능컴퓨팅 등을 활용한 공공·민간 서비스 확대와 이를 통한 서비스산업 육성 등
- (거대·전략기술 기반산업) 우주발사체·인공위성, 대형 가속기, 원자력 등 대형 국가프로젝트 민간 개방으로 산업생태계 구축

- ③ (과학기술 국제화) 과학기술을 활용한 자원외교, 과학기술 ODA 등을 통한 과학한류와 해외일자리 창출

- 지구촌 기술나눔 센터(국내)와 적정과학기술 거점센터(현지)를 구축, 수익창출이 가능한 지역개발사업으로 연결

## 3 산·학·연·지역 연계를 통한 창조산업 생태계 조성

### 가. 과제개요

- 지역 대학·산업·연구소와 지자체를 과학기술을 매개로 하는 융합 공동체로 육성하고, 창업과 신산업 창출의 생태계 조성

### 나. 주요 추진계획

- ① 산·학·연 협력 패러다임을 「창업과 신산업 창출」로 전환

- 산·학·연협력 총괄기구로서 대학 산·학·연협력단의 기능 정상화를 위해 기능재편과 전문인력(변리사 등) 충원 지원 확대
- 아이디어와 도전정신이 창업으로 이어지는 대학 창업생태계 조성
- 교수, 출연(연) 연구원의 기술창업·기술이전 활성화 지원

- ② 출연(연)은 산·학 협력 매개와 중소기업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강화

- 「학연 교수제」와 학연 학생 제도 활성화를 지원하고, 출연금 중 일정비율(5-15%)은 중소기업 지원에 활용토록 의무화

- ③ 과학기술-인재-산업을 연계하는 지역과학기술혁신 체계 정비

- 분산·다기화된 지역 과학기술 지원사업을 지역 특성에 맞게 체계적으로 배분하는 체계 구축(과학기술기본법 개정 검토)
- 중앙정부 중심 지원에서 탈피, 지자체 스스로 지역내 산·학·연 자원과 기술혁신 수요를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역량 육성

- ④ 지역별로 특성화된 창업생태계 조성

- 과기특성화대학은 과학벨트·연구개발특구 제도와 자원을 활용하여 기술사업화 전진기지의 선도모델로 육성
- 지역별 거점대학을 지역 출연(연)과 연계 운영을 통해 지역산업 기술 공급처로 육성

## 가. 과제개요

- 높은 고용창출효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중소기업·유통산업·외국인투자 등을 일자리창출 주역으로 육성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 외국인투자·U턴투자 활성화, 산업R&D 사업화,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도입 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나. 주요 추진계획

- ①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 대기업·협력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생산성·기술력 제고, 임금격차(대기업의 51.9% 수준) 해소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 동반성장 확산·공정거래관행 정착을 위한 2·3차 협력사 대금 지급 모니터링시스템 보급,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확대(1차 협력사 포함)
  - 성과공유제\* 도입확인 기업을 지속 확대( '12년 77개 → '13년 100개)하며, 중견·중소기업간 성과공유제 활성화를 적극 유도
    - \* 성과공유제 : 대기업·협력업체간에 사전 약속에 따라 공동의 개선활동(R&D, 시장개척, 공정개선 등)을 수행하고 그 성과를 약정된 방식(단가 보장, 장기구매약정, 비용보전 등)으로 공유하는 협력활동
  - 대기업 비영리재단, 소셜벤처 등 기업의 공유가치창출(CSV) 활동을 활성화하여 기업경영·사회적 기여·일자리 창출을 연계
- ② (투자 유치)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입지지원, 현금지원 등 인센티브를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프로젝트 중심으로 개편
  - U턴기업 지원 법적근거 마련, U턴 유망업종 전용산단 조성, 공동 R&D센터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집단U턴 유치
  - 각 경제자유구역의 중점 유치업종별 산업특화클러스터 조성
  - 기존 외국인 부동산투자 이민제도 외에 금융상품으로 투자유형을 다양화하는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도입
- ③ (선도자형 산업 R&D 및 사업화) 소재·장비·시스템·제품 생산기업이 공동 참여하여 새로운 가치사슬(Network형)을 만드는 R&D 프로젝트 발굴 지원 및 기술사업화·기술금융 활성화

## 가. 과제개요

- 청년의 도전적인 해외진출 지원과 창직 활성화 등을 통해 청년의 일할 기회 확대

## 나. 주요 추진계획

- ① (K-Move) 「글로벌 스펙초월 취업시스템」을 구축, 열정·잠재력 있는 청년을 선발하여 전문가 멘토링·맞춤형 교육훈련 등을 통해 인재로 양성한 후, 해외진출 지원
  - 「K-MOVE 포털」 구축운영을 통한 현지 일자리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이를 통해 원스톱 종합서비스 제공
  - 「해외취업장려금제도」를 통한 현지 정착 지원과 해외 벤처 캐피탈의 국내 지원 및 로스쿨생 등의 해외 법률분야 취업 지원
- ②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 창직 활성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청년 사회적기업가 양성 확대
  - 자치단체-지역대학-지역기업 등이 연계·추진하는 「우리지역 키우는 창직사업」 신설 및 창직인턴제 확대
- ③ (공공부문 청년층 일자리 확대) 교원, 경찰, 소방, 복지, 고용분야 일자리의 단계적 확대 및 청년 채용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

## 가. 과제개요

- 수출비중이 33%에 불과한 중소중견기업이 세계시장에 눈을 돌리도록 함으로써, 경제위기 극복, 일자리 창출 등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 '11년 무역 1조달러 달성, 수출 7강 진입 등 그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특정 품목 편중, 가격경쟁력 위주 수출로 성장한계 직면
    - \* 수출편중도('12): 주력 5대 품목(반도체, 자동차 등) 41.1%, 13대 품목 80%
  - 해외이전에 따른 산업공동화 우려, 선진국보다 미흡한 소재부품산업 경쟁력, 중국 등 신흥국 추격 등으로 '샌드위치 경제'화
    - \* 해외생산비중 : 휴대폰 81%(123분기 삼성·LG 등), 자동차 51%(12년 현대·기아)
- 이를 위해 중소중견기업 수출비중 제고, 품목 다변화 등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역량을 집중하고, 지원기관별 칸막이 제거를 통해 업종기업 성장단계에 맞춘 수요대응형 수출지원체계 구축

## 나. 주요 추진계획

- ① (중소·중견기업 역량별·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기업의 글로벌화 역량평가와 수출단계(준비·실행·현지진출)별 정책수요에 맞춘 수출지원 패키지 지원 및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한 지역전문가 양성
- ② (신흥시장 마케팅 지원 및 인프라 강화) 해외시장에서 문화한류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결합한 국가브랜드 제고 활동 추진 및 수출지원 인프라(해외전시회, 무역관, 무역보험 등) 확충
- ③ (총력 수출지원체계 구축) 지역별 원스톱 수출지원네트워크 구축 및 대통령 주재 무역진흥전략회의 개최 등을 통해 수출애로 해소
  - \*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을 위해 KOTRA는 국내역할 강화, 중진공은 해외 진출강화

## 가. 과제개요

- 기술과 지식, 아이디어가 활발히 창출되고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활용될 수 있도록 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을 제고

## 나. 주요 추진계획

- ① 창의적 상상력이 풍부한 사회문화와 융합형 과학기술인재 양성
  - 상상·도전·창업 국민운동과 전국 과학관 무한상상실 설치 등 상상력과 아이디어의 씨앗이 퍼지도록 과학문화 활동 다변화
  - 과학기술 특성화대 융합교육 프로그램 지원, 과학고·영재고의 교육·연구 지원을 통한 과학영재 체계적 육성 등
- ② 국가R&D 투자규모 확대와 효율성 제고를 위한 투자전략 정비
  - 정부의 투자는 기초연구에 집중('17년까지 전체투자 중 40%)하고, 연계·사업화연구와 중소·중견기업R&D에 대한 지원 강화
  - 민간 R&D활동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 기술규제 완화 추진
- ③ 창의적 성과 도출을 위해 R&D기획·평가 및 관리 시스템 개편
  - 최종목표와 가이드라인에 따라 연구자가 자율 기획하는 방식을 적극 도입하고, 학술성과 중심 평가에서 기술이전 등 사업특성에 따른 다양한 가치를 평가요소로 반영
  - 정부R&D성과정보 시스템 구축과 후속연구 지원 등 성과활용 강화
- ④ 과학기술인이 신명나게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조성
  - 출연(연)별 미션 재정립과 중장기 비전수립, 출연금 지원비중 확대('14년 70%)와 총액인건비제도를 활용한 정규직 확대 추진
  - 과기인 연금을 사학연금 수준으로 높이고, 65세 정년 환원 검토
- ⑤ 과학기술 중심의 국정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기획인프라 강화
  - 창조경제 구현 위해 과기기본법 범위를 혁신생태계까지 확장
  - 과기기본계획의 실효성 제고위해 부처별 추진계획(5년) 수립



## 가. 과제개요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연구개발특구를 연계하여 기초과학부터 첨단 비즈니스를 연결하는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

## 나. 주요 추진계획

- ① 과학벨트와 연구개발특구 연계로 전주기 R&D 지원 체계 구축
  - 그간 분산 추진되어온 정부지원체계를 일원화하여 기초과학에서 연구성과의 사업화까지 일괄 지원
  - 현지 전담 지원조직을 일원화하고, 과학벨트·특구 내 연구기관의 성과 발굴·확산과 사업화를 체계적으로 지원
- ② 과학벨트를 과학·문화·산업이 융합되는 지식생태계로 조성
  - 기초과학연구원은 인근 대학연구소, 기업체와의 소통과 융합의 중심기관이 될 수 있도록 열린 공간으로 건립
  - 유치한 과학자와 가족을 위한 정주여건(문화·의료·교육 등) 조성
- ③ 기능지구(청원·천안·세종)의 과학·비즈니스 연계역량 강화
  - 기능지구의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고, 지역별 특성에 따라 거점 지구와의 연계전략을 차별화
  -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위한 지역별 역량 육성 및 기반 마련
- ④ 기초과학연구원을 창의인재와 원천지식의 중심기관으로 육성
  - 국내 보유 역량과 국가 전략적 차원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 연구 분야 구성에 관한 계획 수립
  - 각 캠퍼스는 지역별 특성화된 기초연구 거점으로 조성

## 가. 과제개요

- 고교 졸업 후 대학진학의 단선적 진로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다양한 진로중심 직업교육의 기회를 제공
- 취업중심 고교 직업교육 체계를 강화하고, 고졸 재직자의 학위취득 및 경력개발 인프라를 구축

## 나. 주요 추진계획

- ① (법부처 지원) 산업정책·고용정책과 연계하여 소관 부처, 지자체, 산업체가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육성에 참여하도록 장려
- ② (마이스터고 다양화) 국가지역 전략산업, FTA 대비 집중 육성 산업 등 다양한 분야로 마이스터고 지정 확대
- ③ (현장중심 교육 운영)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능력표준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 고교 직업교육에 대한 신뢰도 제고
- ④ (직업교육 기회 확대)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누구나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여건\* 마련
  - \*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입학 시 소질과 적성, 취업의지 등을 중점 반영한 선발 제도를 확대, 취업희망 일반고 학생들의 직업교육 위탁 확대·다양화 추진 등
- ⑤ (고졸 취업자 학위취득 인프라 구축) 고졸 취업자 등 재직자가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학위 취득 인프라\*를 확충하고 재직자 대상 국비 해외유학 프로그램 신설 추진
  - \* 성인근로자 중심 학사운영개선(학점교류, 유연학기제 등), 재직경력의 학점 인정, 후진학 장학금 지원 등

## 가. 과제개요

- 도시권 중심의 지역발전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역의 성장거점을 육성하여 국토균형발전 도모
  - 산업기능 중심의 기존 지역정책을 보완하여 경제권과 도시 생활권을 연계하는 주민체감형 국토발전정책 추진

## 나. 주요 추진계획

- ① (지방거점도시의 지역중추도시권 육성) 10+ $\alpha$  중추도시권에 도시규모·특성 등을 고려한 도시권별 맞춤형 발전전략 추진
  - 도시권 육성을 위하여 맞춤형 도시재생, 신성장동력 발굴, 국민행복 생활인프라 등 핵심 프로젝트 발굴·지원
- ② (세종시 조성) 세종시 기반시설을 적기에 조성하고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인센티브 도입 및 과학벨트 연계발전 등 추진
- ③ (산업단지) 지역 특화산단을 개발하고, 노후산단 재생 추진
  - 식품, 항공 등 지방 중소특화산단을 개발하고 기반시설 지원
  - 노후 산업단지의 기반시설 개선 등 재생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행복한 산단 만들기 사업’ 과 연계하여 업종재편
- ④ (동서통합지대 조성) 섬진강 인근에 영호남간 문화교류, 연계 교통망 확충 등 동서회합과 남부경제권의 성장거점 육성
- ⑤ 지역발전위원회 역할 강화 등 지역 개발 추진체계 개편

## 가. 과제개요

- 지방대학 특성화 및 지원 확대, 지방 대학생 채용할당제 등을 통해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성장의 거점으로 육성

## 나. 주요 추진계획

- ① (지방거점대학 육성) 지방대학 특성화를 위한 집중 투자를 통해 지역대학을 지역성장의 거점으로 육성
  - 지역대학이 소재 지역의 산업발전 및 일자리 창출 거점이 되도록 ‘(가칭)지역거점대학 육성사업’ 추진
  -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사업’을 통해 현장적합성 높은 인력양성, 대학 특성화 및 지역산업과의 동반성장 견인
  - 지방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및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ACE) 사업 개선을 통해 학부학과 특성화를 적극 지원하고 지원비율 확대
  - 대학 평가시 지역·대학별 특성을 반영한 평가방식을 도입하고, 컨설팅 방식을 개선하여 지역대학 특성화와 구조개선 촉진
- ② (지방대학 특성화 촉진) 지방대학의 강점분야 및 지역별 특화 분야를 중심으로 대학의 구조개혁을 촉진하여 지방대학의 경쟁력 있는 학부학과특성화에 집중 투자
  - 지방대학의 경쟁력있는 단과대학, 학부, 학과 특성화를 집중 지원하는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추진

## 가. 과제개요

- ☐ 지역사업 지원의 비효율성과 복잡한 사업구조 개선 등을 통해 기업·인재의 수도권 집중 등 불균형 현상을 지속 완화하고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활력 제고
  - 지역사업구조 단순화, 지역 자율성과 연계성 강화, 행복산업 단지 조성사업 확산 및 지역특구제도의 내실화 추진

## 나. 주요 추진계획

- ① (일자리 창출 중심의 지역산업 재정비) 기존 지역사업을 일자리·지역유망기업 지원중심으로 재편\*하며, 지역인재 양성 활성화

\* 광역선도사업은 지역간연계협력 중심으로, 신흥화사업은 시도주도 기업생태계 지원사업으로 발전

- ② (지역투자여건 개선) 정부-지자체-기업간 투자 협약 도입,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제도 개편('13.1분기) 및 지역별 '투자애로타개회의'를 통해 지역경제 및 일자리 기여도가 큰 프로젝트 지원

- ③ (지자체의 자율성과 연계성 확대) 지자체별 발전계획 수립·사업집행의 자율성·책임성을 확대

- 지역발전위원회의 사업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중기청이 지역일자리창출의 중심이 되도록 하며, 시도별 테크노파크와 혁신도시 등 성장거점 조성사업간 연계협력도 강화

- ④ (지역특구제도 정비) 각종 특구의 신규지정은 신중히 검토하고 중복 지정된 지역의 구조조정, 인센티브 차별화 등으로 특구제도 내실화 추진('13년중 연구용역을 거쳐 연말까지 정비방안 마련)

# 2

## 지방R&D 관련 정부 조직

#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전문(1.15)

##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해서 창조과학을 통해 창조경제의 기반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부역량을 강화할 것입니다. 특히 ICT 관련 정책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전담함으로써 기술융합의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할 것이고, 이를 위해 ICT 차관제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폐지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위원회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설로 교육과학기술부 명칭은 교육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 <해양수산부 신설>

급변하는 해양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전 해양수산부의 기능을 복원하겠습니다. 해양경찰청청은 해양수산부로 소속이 변경되며, 국토해양부는 국토교통부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해양수산부의 신설로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축산부로 개편하려고 합니다.

## <경제부총리제 신설>

국내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부흥을 이끌기 위해 경제부총리제를 신설하여 경제 문제를 적극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

기업 통상환경 개선과 통상교섭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외교통상부의 통상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하여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하려고 합니다.

## <중소기업청 기능 강화>

중소기업의 중견, 대기업으로의 단계적 성장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규제개혁 기능 강화를 위해 지식경제부의 중견기업 정책과 지역특화발전기획 기능을 중소기업청으로 이관하려고 합니다

## <안전행정부로 개편>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하여 국민안전에 최우선하는 안전관리 총괄부처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경찰청이 각종 범죄발생에 보다 책임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생활안전 기능을 단계적으로 보강할 것입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개편>

빈번한 식품안전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먹거리 안전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해 총리소속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하려고 합니다.

## <특임장관실 폐지>

특임장관실은 폐지합니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박근혜 정부가 향후 5년간 창조경제와 창조과학을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행복한 국민행복시대를 달성하기 위한 경제부흥을 위해 추진동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도록 개편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위원회는 차후 청와대 조직개편안 발표 때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부 하부 조직 개편안 발표 전문(1.22, 인수위)

대통령직 인수위는 지난 1월 15일 정부조직개편의 방향과 부처신설 및 개편에 대해 얘기했다. 오늘은 보다 구체화해 부처간 세부기능 이관 내용을 설명하겠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의력 상상력에 기반한 창조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당선인의 의지에 따라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복수차관을 뒤 각각 과학기술과 ICT를 전달게 했다.

과학기술전담차관 소속으로는 교과부, 국과위, 지식경제부로 분산돼 있던 과거 과학기술부 기능을 이관하려 한다.

교과부의 산학협력기능, 지경부의 신성장동력발굴기획기능, 총리실 소관 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전략기획단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로 변경한다.

교과부 산하 기관 기초기술연구회 지경부 산하 산학기술연구회도 미창조과학부로 이관한다. 산업과 과학의 융복합을 촉진하고, 신성장 동력을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다.

ICT 전담차관 소속으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융합 및 진흥기능, 행정안전부의 국가정보화 기획, 정보보안 및 정보문화 기능을 이관한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는 디지털 콘텐츠와 방송광고, 지식경제부에서는 연구개발 정보통신산업진흥 소프트웨어산업 융합 기능을 이관하려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와 같이 방송의 규제 기능을 담당할 것이며 특히 공공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사회문화적 성격의 규제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우정과 통신서비스 연계성을 강화해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으로 이관한다.

ICT 정책조정을 담당하는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ICT 전담부처 신설에 따라 폐지된다.

해양수산부에는 국토해양부의 항만 해운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연구개발 기능,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산 어촌개발 수산물 유통에 관한 기능이 이관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해양레저스포츠기능도 해양수산부로 이관한다.

▲기존에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R&D 예산을 분배했는데 그 기능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새 부서의 명칭 줄임말은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했는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기능은 미래창조과학부로 모두 이관한다. 약칭은 현재 생각하지 않았다.

▲대학 부분은 교과부에 남는가 아니면 미래창조과학부로 가는가? 또 각 장관의 서열이 법으로 규정되는데 서열은 어떻게 되는가?

-대학 부분은 전통적인 교육부의 종합대학은 교육부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한다. 부처 간 서열의 부분은 행정안전부와 협의해서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할 사항이다.

▲교과부의 인재양성기능이 미래창조과학부로 넘어가는가? 금융 관련 개편 여부는 앞으로 논의할 가능성이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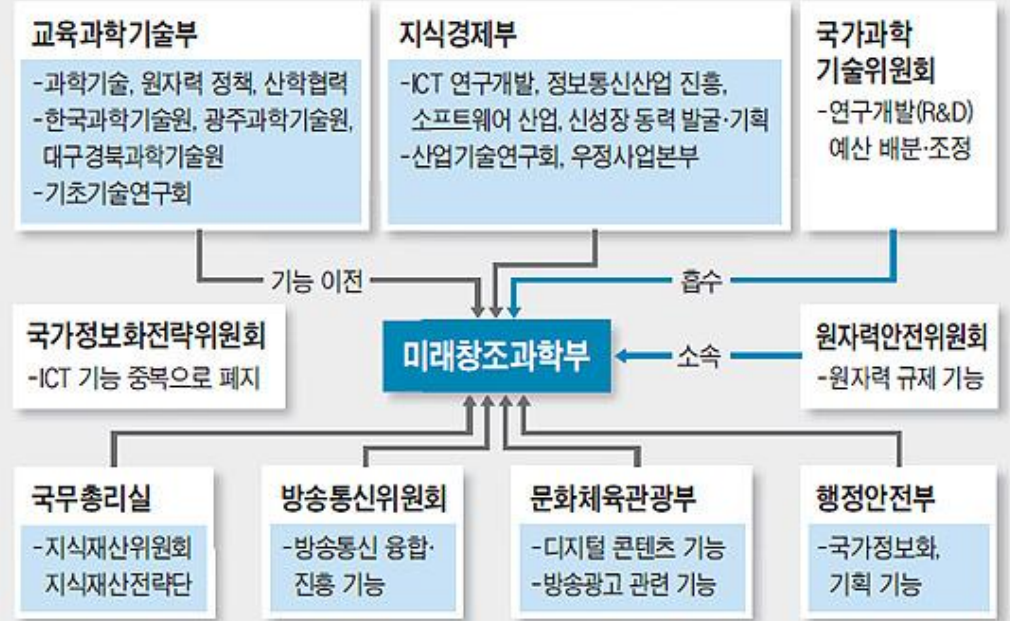
-기재부에서 가진 장기 전략 기능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연구개발과 관련한 미래 예측 및 전략 수립은 미래창조과학부 기능으로 이해하면 된다. 금융 부분은 현재 학계나 금융계에서 많은 문제의식을 가진 것으로 안다. 면밀히 검토해서 향후 금융부분 조직 구조도 개편이 필요하다면 로드맵에 포함할 것이다. 인재양성의 경우 과학기술분야의 고등교육만 미래창조과학부로 옮겨가고 초중등과정에서 융합 인재양성 교육은 교육부에서 담당하게 된다.

# 세부 개편안 주요 내용과 미창부 이관 기능

## 새 정부조직 세부 개편안 주요 내용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전되는 기능 ☐ 기존 부서에서 이전되는 기능



# 청와대 조직개편(1.21, 인수위)

이번 청와대 조직개편안은 지난 번 정부조직 개편안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추구하는 국정철학과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메시지 담았다.

무엇보다 불필요한 예산 낭비 줄이고 행정 부처와 청와대 조직이 본연 업무 책임질 수 있도록 청와대 조직 체계를 일원화하고 비서실의 기능을 통합하려는 의지를 담았다.

크게 비서실 조직의 간결화, 대통령의 국정 어젠다 추진역량 강화, 그리고 국가 전략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중요한 원칙으로 삼았다. 이러한 원칙 반영해

1. 현재의 청와대 비서실 조직보다 작은 2실 9수석 체제로 설계했다. 현재 조직에서 정책실장 및 기획관 제도 폐지하고 일부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보고 체계를 단순화했다. 9 수석은 정치 영역을 담당하는 정부 민정 홍보 수석과 정책 영역의 국정기획, 경제, 미래 전략, 교육문화, 고용복지, 외교안보 수석으로 구성하려고 한다.

2. 대통령의 국정 어젠다추진하기 위한 역량 강화하기 위해 국정기획수석실 두어 국정 전반을 기획 조율하고 국정어젠다를 책임있게 관리하며, 미래전략수석실을 두어 미래의 성장동력, 기후 변화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국가 미래전략 기능을 강화하고자 한다.

3. 대외적 안보상황이 급변하고 있어 국가안보실 신설해 국가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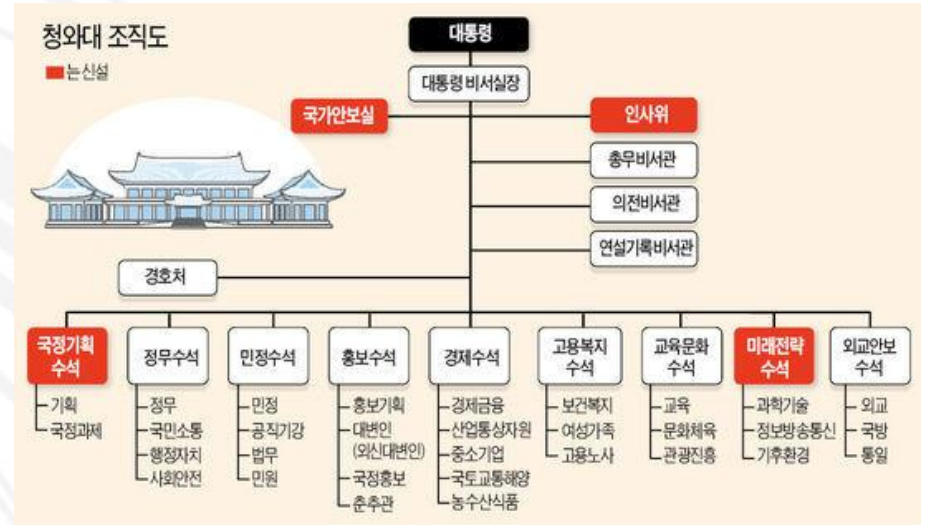
이외에도 대통령실을 비서실 본연의 기능에 부합하도록 비서실로 명칭을 변경한다.

또 대통령이 임명하는 인사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사위원회를 두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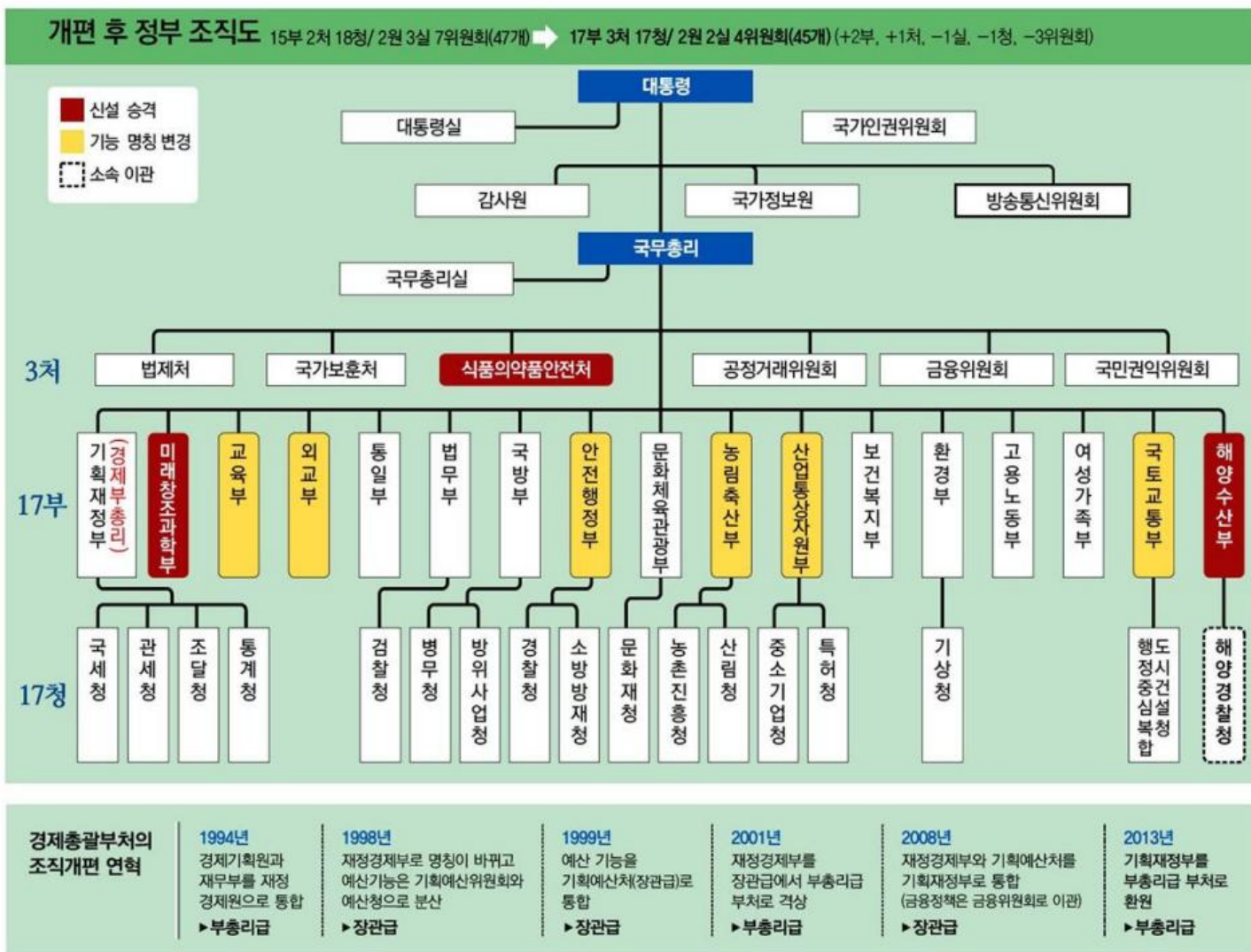
앞으로 청와대 비서실은 대통령이 국정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게 국정 의 각 분야를 충실히 보좌하고 국무위원에게 정책 수립, 집행할 수 있는 권한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것이다.

각 부처 장관과 중복되는 기능을 배제하고 청와대 비서실은 국정운영의 선제적 이슈를 발굴하고 행정부가 놓치는 일들을 챙기며 사전 사후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등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에 집중하고 각 부처는 장관이 실질적으로 부처 업무를 수행하며 결과에 책임지는 체제로 전환될 것이다.

국민통합위원회 청년위원회를 신설하고 기존의 지역발전위원회 기능을 계승 발전하겠다. 기타 위원회는 폐지를 원칙으로 한다.



# 정부조직도(안)



# 3

그간 주요 지역R&D 논의사항



# 지역R&D 지원체계 개선방안

## 지역 R&D 패러다임 전환

- 지역 R&D를 '**자율과 책임**'에 기초한 성과관리 중심으로 전환
  - 지역의 자율성 강화 및 성과에 따른 차등지원
-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역할분담
  - (중앙부처) 대형·기초원천연구, 시도 연계협력사업
  - (지자체) 현장중심 응용개발연구, 지역산학협력사업

## 주요 추진과제(1) – 거버넌스 정립

### ■ 지역과학기술위원회 활성화

- (기능) 지자체 R&D 추진전략 제시, 과학기술현안 조정 등  
**지역 내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 (설립방법) 현재 설치되어 있는 지역과학기술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운영하고, 미설치 지역은 신규로 설립
  - \* '11년 현재 **14개** 지자체에 지역과학기술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나, 실질적 활동을 수행한 곳은 **7곳**에 불과
- (위원구성) 지역 내 **산·학·연 민간전문가**로 구성하고, 위원회 대표를 국과위 지방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

14/25

## 주요 추진과제(2) – R&D 추진 기반 구축

### ■ 지자체 산하 R&D 전담조직 설립

- (기능) 지역 내 R&D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R&D 사업을 **기획**하고 **지역과학기술위원회를 지원**
- (설립방안) 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연구개발지원단 및 시도 발전연구원 R&D 조직의 관련 **기능 통합**

### ■ 지자체 R&D 사업 관리·분석 기반 마련

- 지자체 예산 체계에 **R&D 코드**를 도입하여, R&D 사업의 체계적 관리 기반 마련

15/25

## 주요 추진과제(3) – 재정지원 제도 개편

### ■ R&D 포괄보조금(사업) 제도 도입 (1안)

- (개념) 중앙부처는 사업의 기본적 가이드라인만을 제시하고, 지자체가 R&D 사업을 자율적으로 기획·추진
- (도입방법) 광역계정 R&D 사업 중 지자체 주도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을 선정하여 **지역개발계정으로 이관**

16/25

## 주요추진과제(3) – 재정지원 제도 개편

### ■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 도입 (2안)

- (개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을 위한 R&D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 내용 및 투자 분담 계획** 등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는 제도
- (법적 근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0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0조(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이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내용 및 투자분담 등이 포함된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18/25

## 주요추진과제(3) – 재정지원 제도 개편

### ■ R&D 포괄보조금(사업) 제도 도입 (1안)

- (운영개요) 3년간 시범운영 후 본격 실시

[시범운영]: 초기 3년

소규모 R&D 사업  
- 지역 영세기업 기술지원  
- 지역 내 산학연 협력체제 구축 등

[본격실시]: 3년 이후

규모의 확대 + 신사업 발굴  
- 기존 R&D 사업  
- 지역 성장동력 발굴사업 등

평가

- 운영절차



17/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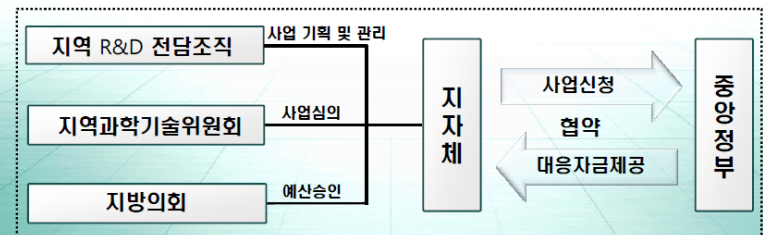
## 주요추진과제(3) – 재정지원 제도 개편

### ■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 도입 (2안)

#### ➢ 협약 대상사업

- 1년 이상의 다년도 R&D 사업으로 안정적인 재원지원과 성과에 따른 차등지원이 가능한 사업
- 여러 중앙부처와 관련이 있어 지역 차원의 종합적 접근이 필요한 사업

#### ➢ 추진체제



19/25

## 주요추진과제(4) – 지역 R&D 사업 재정비

### ■ R&D 사업 기획시 지역의 비교우위 분야에 집중

- 지역 산업 수요 및 경쟁력 등에 대한 고려없이  
지역 간 유사사업을 추진하는 경향에 탈피

### ■ S/W성 R&D 중심으로 지역 R&D 사업 전환

\* 시설·장비 등 H/W →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 S/W

### ■ '지역 R&D 지원체계 개선방안' 추진경과

- 국과위 - 지역위 협의(3.7)
- 관계부처 1차 회의(3.29)
  - \* 국과위, 지역위, 재정부, 지경부 4개 기관
- 중기청, 국토부 등 기타 부처 서면 의견수렴(4.3)
- 전문가 포함 관계부처 2차 회의(4.30)
  - \* 국과위, 지역위, 교과부, 지경부, 중기청 및 지역 R&D 전문가

23/25

### ■ 관계부처 협의결과 – 이견 표출

- (지역위) '지역 R&D 개선방안'에 대한 각 부처의  
시각이 판이하게 달라 **시간을 두고 조율**할 필요
- (지경부) **TP 개편**은 어려우며, R&D 포괄보조금은  
**사전준비가 미흡**하고 **도입시기**가 부적절
- (교과부) 기본 방향은 동의하나, 교과부 사업의  
**R&D 포괄보조사업 전환**은 수용불가
- (중기청) R&D 포괄보조사업 및 R&D 전담조직은  
**지방중기청의 업무영역과 중첩**이 예상되므로 수용불가

23/25

(출처) 김화동 국과위 상임위원, 지역R&D의 미래를 말한다, 제56차 과실련 정책연구포럼, 2012. 6.



## 지역R&D 효율화를 위한 정책추진 방향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역할을 중심으로 -

차두원 외

I. 작성배경	3
II. 지역R&D 현황 및 문제점	6
III. 「국과위」 정책방향 제언	19
IV. 결론 및 시사점	28

##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거버넌스 개편방안



### 지자체 내 정부연구개발사업 추진 현황

근래 몇몇 지자체를 중심으로 관내에 설치된 대학, 출연연 문원, 테크노파크, 지자체연구소, 과학연구단지, 전문생산연구소, 지역혁신센터, 지역연구산업지원단 등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 혹은 전설링을 수행하고 있다. 대부분 대상은 중앙정부 부처 사업에 지자체가 지방비 매칭을 통해 운영되는 사업으로 그 과정에서 지자체에서 수행중인 정부연구개발사업 운영의 단면을 볼 수 있다.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으로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예비타당성평가를 통과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주·수행하는 기관은 나름 자부심 있고 야심찬 모습을 보여준다. 반면, 특정부처 사업으로 설립되고 지원기간이 종료하여 자립기에 들어 운영비 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관의 어려움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 전략산업도 아니고, 함께 수행하면 사업비 및 참여진 규모가 확대되고 협력이 기대되는 등 시너지가 예상되는데 중앙정부 지원 부처가 다르다는 이유로 유사한 임무를 복수의 연구기관이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들 기관 입장에서는 사업비를 제공하는 중앙정부 및 관리기관 평가에 지자체가 관여하는 것을 그리 달가워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지자체 입장에서는 관내에 설치된 기관과 수행하는 사업이 지자체 경제, 산업, 과학기술, 고용창출 등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싶어 한다. 이것이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현실이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지역발전위원회 협력체제 구축

지역발전정책과 과학기술정책을 담당하는 지역발전위원회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간 원활한 정책 협력과 조정이 미흡하다. 그러다 보니 지정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교과부(한국연구재단), 중기청(지방중소기업청) 등에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행 중인 정부사업들 간 유사·중복, 미흡한 협력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나, 관련 사업



차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책기획실 실장  
doowoncha@kistep.re.kr

# 대형 H/W 중심에서 S/W 사업으로의 전환

## □ 현황 및 문제점

- (H/W vs S/W) 실적점검으로 파악된 지방과학기술진흥 사업의 상당수가 인프라 구축 사업이나,

\* '11년 총 1,570개의 사업 중 240여개의 사업이 인프라 구축사업

- 연구센터, 장비 등 既 구축된 인프라 운영을 위한 지원이 미흡

< '11년 국과위 지역별 간담회 시 인프라 관련 주요 건의사항>

- 국가 거대 연구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운영체계 구축 필요 (경북)
- SP 및 TP 관련 연구소의 운영난 극복을 위한 지원 필요 (전북, 경남)
- 지역 중소기업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거점기관의 S/W적 지원 확대 필요(제주)
- 지역에 구축된 연구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 및 인력양성 필요(울산)

- (중앙정부 vs 지자체) 전체 지방과학기술진흥 투자에서 지자체 투자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34.1%에 불과

- 지자체 총예산에서 과학기술진흥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21%이며 인천, 부산, 대구를 제외하면 1% 수준으로 시·도 별로 큰 격차

- 지자체의 과학기술진흥 투자 대부분은 중앙정부 R&D사업에 대한 대응자금으로 집행

## □ 향후과제

- (H/W vs S/W) 既 구축된 인프라 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 정부 차원에서 지역별 인프라 운영비 확보 현황의 정례적 점검 필요

- 신규 인프라 구축사업 검토 시 운영인력, 운영비 등 인프라 운용 계획의 타당성을 엄밀히 검토

- (중앙정부 vs 지자체) 지자체가 과학기술투자를 정책적 우선순위에 놓을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R&D 포괄보조금', '역제안제도' 등 지자체의 과학기술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 도입 검토

- 지자체 합동평가\* '과학기술부문'의 지표를 지자체 총 예산 대비 과학기술 투자실적으로 설정하여 지자체 과학기술투자 확대 유도

\* 행안부 주관의 지자체 평가로 그 결과를 차년도 지자체 교부금에 반영

(출처) 2011년 지방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 2011년 실적점검

# 4

**향후 정책추진 방향은?**

# (지역발전위) 새로운 지역발전 정책 방향(2013. 1.)

국민행복과 지역통합을 선도하는  
새로운 지역발전 정책 방향

2013. 1

## [지역 발전 미래상]

- 비전 : 국민의 행복과 지역 통합을 선도하는 살기 좋은 지역
- 목표 : ① 주민 삶의 질 향상, ② 지역 일자리 창출, ③ 도시경쟁력 및 농어촌 활력 강화, ④ 지역간 상생 발전

## [한반도 경제권 구축]

- 통일한국이 동북아 경제권 중심, 선진국 도약을 위한 국토경영전략



- 남한 중심 글로벌 광역경제권인 3+1 한반도 경제권 형성
  - 중부경제권(수도권+충청권+강원권) : 글로벌 허브, 창조산업 메카
  - 남부경제권(영남권+호남권) : 지식기반 제조업, 물류산업 중심지
  - 제주경제권(제주특별자치구) : 동북아 해양관광 거점
  - 북부경제권(북한전역) : 자원 및 에너지 산업 중심지

## [주요 추진 전략]

### 1. 지역 일자리 창출 비전 : 국민의 행복과 지역 통합을 선도하는 살기 좋은 지역

- ① 중소기업 중심 지역특화산업 일자리 창출
- ② 대학중심 산학협력에서 기업중심 산업융합
- ③ 기업하기 좋은 지역 만들기(지방투자 활성화)
- ④ 통합적 지역 일자리 추진체계 확립

### 2. 지방 중추도시권 육성 방안

- ① 지방 대도시권 : 지역별 발전 선도 거점지역
- ② 중소도시권 : 대도시권 기능 보완

대도 시권	부산(울산, 창원), 대구(구미), 대전(세종, 청주), 광주(나주), 전주(익산, 군산)
중소 도시	천안·아산, 포항·경주, 광양만(여수·순천·광양), 진 주·사천, 제주, 원주, 춘천, 안동·영주

### 3. 농어촌 활성화

### 4. 지역발전 재정지원 체계 개편

- ① 광특회계 → 지역활력증진회계로 개편
- ② 중소기업육성 : 중기청사업으로 통합
- ③ TP, 특화, 혁신센터 사업 통합 : TP 포괄지원

- ④ 지역투자촉진보조금 확대개편
- ⑤ 인력·산학협력 사업 개편, 마이스터·특성화고 확대
- ⑥ U-Turn, 지방이전 기업 지원 확대
- ⑦ 포괄보조금을 시군구로 배분하고 지자체 자율성  
침해여부는 지역위에서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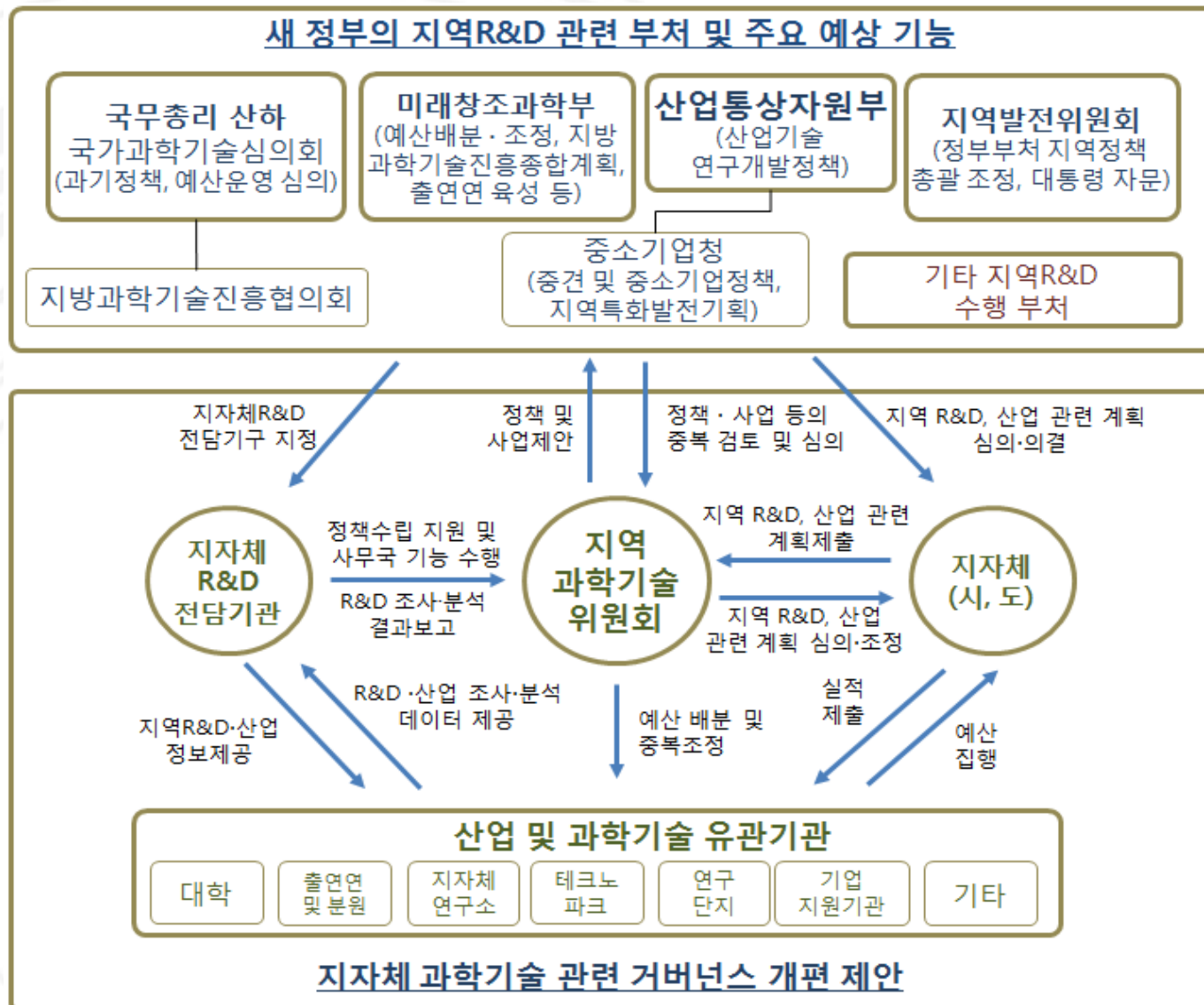
### 5. 지역정책 집행체계 개편

- ① 지역위 위상강화 : 행정위로 개편하고 주무부처  
변경 (예 : 해안부, 기재부, 국토부, 농수산부)
- ② 광역위를 8개 권역별 기능 확대·개편, 위상 강화

### 6. 중부남부경제권 구축

- ① 거점도시-주변지역간 교통체계 정비를 통한 지역  
간 접근성 향상
- ② 생활기반·서비스 시설의 공동개발·이용 등 지자체  
간 연계협력 활성화 추진을 통한 상생발전 추진  
(개편 기구 중심 지역별 집행기관 연계체제 구축)
- ③ 광역자치단체의 기초지자체 지원조정 기능 강화
- ④ 기초자치단체 역할 및 역량 강화

# 향후 예상 지역R&D 거버넌스(그간 논의 반영)





# 충청남도 중점추진과제(출처 : 2012 지방과학연감)

- (과학기술 조정기능 강화) 과학기술진흥조례 제정, 과학기술위원회 발족, 과학기술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정 등 지역 R&D 조정기능 마련
- (자체 R&D 사업 기획 역량 강화) 자체 R&D 사업 기획을 위해 TP에 미래 산업기획연구단 사무국을 운영하도록 하여 지역의 R&D 기획역량을 강화
  - ※ 경기과학기술진흥원, 부산연구개발전략센터 등이 운영 중
  - ※ 전북이 과학기술위원회 Best Practice(충남 2011 실적 0)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활성화) 천안 기능지구 내에 Science Biz Plaza 건립, 산·학 연구개발 지원, 과학-비즈니스 융합전문가 양성, 충남 TP와 특화센터 연계를 통해 충남 과학 및 지식생태계 조성 추진
- (녹색성장 비전과 전략 제시) 지역 주도 사업기획과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지역 에너지 충남 구현을 위한 58개 추진사업 제시
- (과학-전문가 융합 전문가 양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연계하여 과학-비즈니스 융합전문가(PSM) 양성건인 및 새 일자리 창출

# 향후 전략 방안은?

- 지역과학기술혁신 체제 정비(과학기술-인재-산업 연계) → **수정계획?**
  - 정부지원 사업을 지역 특색에 맞게 체계적인 배분체계 구축(과학기술기본법 개정)?
  - 지역 내 산학연 자원과 기술혁신 수요 발굴 지원 역량 육성
- 정부의 지역R&D 거버넌스와 부처·위원회별 역할·사업 변화에 대비
  - (지역위) 기능강화와 광역발전위 권한 및 조직개편, 관련 사업 개편
  - (R&D actors 융합) 대학의 창업기지화, 출연연 산업협력 핵심 및 중소기업 지원
  - (신성장동력 발굴) 기존 핵심산업 및 R&D와의 연계 방안은? Best Practice?
- 지역 특화 창업생태계 구성 : 지역 내 연구조직간 융합! → **지자체 R&D actors 역할과 거버넌스 개편?**
  - (과기특성대학) 과학벨트, 연구개발특구 제도와 자원 활용 기술사업화 전진기지 선도모델 육성
  - (지역거점대학) 지역 출연연 연계를 통한 지역산업 기술공급처 육성
  - (대학의 창업기지화) 지역 거점 지역대학별 산학연 K-Valley 창업 클러스터 구축
  - (지역 창직 사업) 자치단체-지역대학-지역기업 연계 추진(창직인턴제 확대)